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12월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

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 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지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은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장, 고가 부동산 상시검증… 변칙 증여 집중대응

국세청이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세무검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자금출처 검증 대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을 꼽았다.

편법적 상속과 증여로 노력 없는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경 너머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자녀 회사 등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을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체, 노년층을 노린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보조기기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